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예고

### 1. 제정이유

가. 중앙정부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2011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공포하여 2012년 3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하여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시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시장은 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의 구축 및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참여 장려와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kimcs46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분석평가 대상 정책 또는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분석평가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2.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3.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분석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분석평가 교육)**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자문)** ① 시장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시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성인지예산·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4호에 따른 사항과 성인지예산·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6조(시민참여 조성)**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분석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6호, 2011.9.1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2.3.16] [대통령령 제23656호, 2012.3.13, 제정]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



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12.2.5] [법률 제10991호]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